"진정한 사과·반성없다" 아베 담화 비판 봇물

국내 정치권 이어 해외서도 질타 이어져

美하원 외교위원장 "기대 충족 못해 실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물론 외국에서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기념관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담화가 일본과 일본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일본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우당(友堂)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70년 담화는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며 "아베 정권이 스스로 사죄하고 반성할 수 있는 양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에서 "며칠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총리가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꿇고 사죄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며 "아베 총리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간의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역사학자들까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용어로 역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전쟁포로들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의 잔혹한 식민지배와 위안부 범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번 담화는 한일간에 역사적 불화를 해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잃어버린 기회'"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더 직접적으로, 특히 한국에 대해 (위안부 사과 등) 더 직접적으로 나섰더라면 양국 간 긴장을 낮추고 관계를 개선하며 심지어 화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더 강한 기반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규탄 성명에서 "서구 열강의 세력 팽창과 맞물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내용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모든 담화 내용을 과거 형으로만 명시한 것은 아베 정권에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아베 총리 담화가 발표된지 6시간만에 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베의 '전후 70돌 담화'에는 침략 역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담겨 있지 않다"며 "죄악에 찬 과거를 가리워보려는 일본 우익 보수세력의 시도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홍콩에서도 비난 성명이 잇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인 찬융(陳勇) 홍콩 신계사단연회(新界社團聯會) 이사장은 16일 친(親)중국계 신문 대공보(大公報)에 "아베 총리의 담화는 이전 총리 두 명의 담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일본 제국군대가 잔인하게 학대한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화해를 추구했어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담화는 가식적이었으며 이전 지도자의 발언을 립서비스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불타버린 차량들 지난 13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중국 동북부 톈진항. 창고 철골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새 차들이 순식간에 타버렸다. /연합뉴스

中 톈진 폭발사고 사망·실종자 200명 넘어

소방관 피해 100명 웃돌아

반경 3㎞ 긴급 소개령

지난 12일 중국 톈진(天津)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14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톈진 폭발사고로 소방관 등 112명이 숨지고 95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사고 희생자 중에는 최소한 21명의 소방관이 포함됐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특히 소방관 실종자 수도 85명에 달해 전체 소방관의 사망·실종자 수가 100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번 폭발사고 참사의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날 현재까지 신원 파악이 이뤄진 희생자 시신은 모두 24구라며 나머지 시신들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상자 가운데 위중한 환자도 적지 않아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현재 톈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부상자 721명 가운데 58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 수는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톈진 폭발참사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피의 교훈'을 깊이 새기라며 뼈아픈 자성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안전 관념을 새로 수립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추진해 당정에 함께 책임을 묻고 담당관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5일 낮에는 사고지역 일부에서 다시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들리면서 소방당국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톈진 공안은 전날 오전 폭발 중심부에서 반경 3㎞이내 지역의 모든 인력에 긴급소개령을 내렸다. . /연합뉴스

국정감사 연기론 '솔솔'

여야 이번주 합의 못하면

10월 실시 가능성 높아져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애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협상 시한으로,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전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감이 연기되면 10월에 실시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16일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감은 야당이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자리인데, 이를 차일피일 늦추는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그가 말한 '선행 조건'이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으로,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감 전략을 짜기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오는 25일로 정해 놓은 상태다.

기존 잠정합의를 지켜 다음달 4일에 국감을 시작하려면 피감기관 및 증인·참고인 선정을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주까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 원내지도부가 앞으로 일주일 내에 국감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일정은 순연될 수밖에 없고,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월 재보선 전남 광역·기초의원 3곳 등 24곳 확정

오는 10월28일 실시되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전남도의회 함평군 제2선거구를 비롯해 경남 고성군수 선거 등 광역의회 의원선거 9곳, 목포시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 14곳 등 총 24곳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광주는 한 곳도 치러지는 곳이 없으며, 전남은 함평군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선거와 목포시의회 라 선거구, 신안군의회 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실시하도록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10·28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은 10월 8~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접수하며,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00만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가시화

김성곤의원 등 잇단 법안 발의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 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세계 한(韓)문화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25일 김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한인민주회의(의장 문재인 대표) 의장단 회의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도 7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상품안내

단위 : 만원(VAT별도)

구 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 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 회 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LIZ GOLF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